

김상조 만난 김기문 “中企전용 전기료로 최저임금 보전을”

(청와대 정책실장)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김상조 靑 정책실장 日 무역보복 관련 '소통간담'

기업 47% 日 무역보복 대응책 없어
“폐쇄적 수직계열화 대기업, 반성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 점검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와 소재·부품 수입채널 다변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던 중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 가운데 진행한 '소통간담'에서 “내수 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익을 우선시 하는 적극적인 경제외교 추진 ▲민간 경제교류 채널

구축 및 활동 지원 ▲대일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대책 및 금융지원 방안 강구 ▲소재·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국산화 전문중소기업 육성 ▲주요 소재·부품의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일본에 금형을 수출하고 있는 경기 안산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부터 한일간에 정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넘어 우리 수출품에 대한 통관지역

등의 조치까지 있을 땐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가 59%로 가장 많았다. 또 수입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42%가 '1년 이상'을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46.8%는 자체적으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1세기에 모든 부품 장비는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었지만, 중소·중견 기업 역할은 소재 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를 했던 대기업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협력 파트너로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대기업, 중기가 협력

해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높이는 장기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는 중부하요금에서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하고,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는 봄, 가을철 요금을 적용해 공장 가동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업당 총 12%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경제정책에 대해 “유연성보다 일관성에 더 초점을 뒀어야 하는게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본다”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시장의 기대가 안착, 형성될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할 분야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민주당 “추경에 소재·부품 예산 포함할 것”

한국당 “반일감정 편성 안돼... 외교셈법 필요”

日 경제보복에 엇갈린 여야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소재·부품·연구개발(R&D) 분야 사업 예산을 포함하겠다고 알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관련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이같은 대응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규제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이라는 추경안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재·부품 등 관련 개발 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전하며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향해 “합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관계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다”며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적·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도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산자위는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으로부터 추경 운용 계획(제안설명)을 들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을 더 압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무역보복에 당황스럽지 않도록 생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결이 나오는 데에만 15개월이 걸리고, 일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재판은 2~3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면세한도 초과면 ‘관심 여행객리스트’

관세청, 관련법 이르면 내달 시행

오는 8월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행정예고됐고 이 기간 업계의 이견이 없어 규제 심사만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일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위증논란’ 윤석열 싸고 여야 공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여야 공방은 식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은 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 할 검찰총장”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강조했지만, 야권은 “무자격자”라며 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위장전입·투기의혹·음주운전·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윤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답변 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중대한 혐의는 아니라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하지만 야권은 “부적격하다”며 윤 후보자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부의장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수사대상자 4명이 자살할 정도로 전 정권 인사를 향한 강압적 수사했고, 압수수색 등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볼 수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윤 후보자의 완벽한 거짓말과 뻔뻔함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의 관계를 ‘조직폭력배적 의리’에 비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경우 “공연히 정정을 유발하지 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 논란을 자초했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내놓은 해명이 또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위증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